



연합노보



2015
특보
3.5 목

www.newsunion.co.kr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을곡로2길 25 / 전화 398-3620~2 / 팩스 398-3630 / 발행인 오정훈 · 편집인 이을·김태균

차기사장 5명 지원... 부적격 인사 다수 포함

김성수 · 박노황 · 박호근 · 성기준 · 오재석

연합뉴스 차기 사장 후보에 5명이 지원했다. 지원자 중에는 인사 전횡과 불공정보도로 2012년 103일간의 파업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

앞서 연합뉴스 노동조합 소속 구성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횡으로 파업축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치권에 줄을 댄 낙하산인 경우는 연합뉴스 차기 사장으로 부적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장 공모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4일 마감까지 지원서를 낸 후보자는 김성수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본부장, 박노황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 박호근 전 연합인포맥스 사장, 성기준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 오재석 연합뉴스 국제·사업담당 상무 등 5명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본부장은 2009~2012년 편집총책임자인 편집상무를, 박노황 특임이사는 편집국장과 국제·업

무상무를 지냈다. 이들은 인사 전횡을 일삼은 것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 보도, 4대강 사업 찬미 특집기사, 내곡동 사저 사건 해명 일색 보도,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공판기사 등 기본이 깃뻛힌 편향 보도로 2012년 103일간의 파업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준정부기관인 언론재단의 경영본부장인 김 본부장은 사기업인 연합뉴스에 오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관련성은 퇴직 전 부서와 취업예정업체 간 재정보조, 인허가, 감사, 계약, 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인정된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취업제한을 받는다. 언론재단 경영본부장은 560억원 상당의 언론진흥기금을 담당하며, 이 기금으로 기획취재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는 언론진흥기금에서 기획취재를 위해 2013년 3천500만원, 2014년 1천1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박호근 전 사장은 2009~2012년 연합인포맥스 사

장을 지냈다. 그는 사장직에 있던 2012년 총선 당시 고향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가 막판에 포기했다.

성기준 상무는 2009~2012년 노사협상 담당인 기획총무 상무와 전무를 지내 역시 파업 촉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는 2007년 편집국장으로서 재직할 때 특종보도였던 신정아 박사학위 학력 위조 기사가 송고된 지 2~3시간 뒤 기사를 전문 취소 삭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오재석 상무는 2008년 편집국장, 2012년 한민족센터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아랫사람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소통능력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합원들은 차기 경영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로 경영능력과 함께 사내 구성원과의 소통능력을 꼽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연합뉴스 사장 선출을 위한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문

우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선임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오늘 연합뉴스 사장 지원자 5명 중 복수로 예비후보를 결정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뽑히는 예비후보 중 앞으로 3년간 연합뉴스를 이끌어갈 사장이 결정된다.

연합뉴스 사장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내부 출신이지만, 연합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권의 입맛대로 보도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미 한 차례 연합뉴스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음은 물론 의견수렴 없는 독선적 경영, 소통 대신 일방적 지시와 의사결정,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는 인사전횡으로 지난 2012년 연합뉴스 구성원들을 103일간의 파업으로 내몬 바 있다.

우리는 결코 이들에게 연합뉴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으며, 부적격자가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결연히 싸울 것이다.

우리는 특히 사장추천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부적격자나 무능력자, 파업축발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차기 사장의 조건으로 경

영·소통 능력과 공정보도 의지를 꼽았다. 반면에 불공정보도와 인사전횡으로 파업축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경우,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정치권에 줄을 댄 낙하산 인사인 경우 부적격으로 지목했다.

사추위와 진흥회는 구성원들의 이런 염원을 받아안아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권은 YTN에 언론계 특히 방송사 경영에는 아무런 이력이 없는 금융인을 밀실에서 선임하면서, 공영언론 장악 시도를 시작했다. 방송 문외한이 과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지켜낼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YTN과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올해는 MBC, KBS와 EBS 사장까지 공영언론 새 사장과 이사 선임이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공영언론 장악 시도에 맞서 어깨를 맞대고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 나아가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2015년 3월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표현의자유와언론탐압공대위



사추위는 거수기로 전락해선 안된다

연합뉴스 차기 사장을 선출하는 첫 관문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뉴스통신진흥회에서 열린다.

이번 사추위원 5명은 향후 3년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의 미래를 책임질 인사를 진흥회에 추천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추위원들은 복수예비후보 추천 과정에서 응모자들의 과거 이력과 미래 비전을 면밀히 살피고 이들이 정치적 중립과 연합뉴스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공정보도'를 지켜낼 인물인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공정보도, 인사전횡으로 연합뉴스를 사상 초유의 103일 장기 파업으로까지 몰고간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단호히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지난 2012년 3개월 반 동안의 무노동 무임금을 견디며 '공정보도 쟁취', '사내민주화 쟁취'를 위해 아무런 조건없이 희생을 감내했다.

또다시 연합뉴스에 분란의 소지를 일으킬 인사들이 입성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는 뉴미디어 시대에 따른 변화의 파고를 넘어서 국가 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갈등을 봉합할 통합형 인사가 필요하다.

사추위원들은 오늘의 판단이 연합뉴스와 그 관계사의 명운이 걸린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추위원들이 밀실에서 낙점받은 인사를 통과시키는 거수기가 된다면 노동조합은 그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사장공모 지원자 면면



박정찬의 친위대 김성수...불통의 대명사

1981년 공채 1기로 연합뉴스에 입사한 김성수씨는 1998년 이후 20년 가까이 편집국을 떠나있다가 2009년 박정찬 전 사장의 오른팔을 맡으면서 편집상무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미 고문단 연락장교 출신인 그는 군대에서 배운 의전기술을 이용해 밤낮으로 박 전 사장에게 충성했다. 그는 본인 이름의 약자이기도 한 S.S.(나치의 친위대원)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에 아랑곳없이 임원이면서 편집국의 기사에 세세하게 간섭해왔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으로 신설된 노사편집위원회에서는 편향보도에 대한 문제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편집위원들의 입을 막고 일방적인 설교를 하곤 했다. 간부부터 평가자까지 그의 독설은 끊임 없이 있었다. 소통 대신 일방적 지시와 의사결정, 합리적인 인사 대신 객관적 기준 없는 인사전횡이 횡행했다.

그로 인해 연합뉴스는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의혹 규명 은커녕 사실 보도도 못 하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고, 구성원들은 103일간의 파업전선에 나서야 했다. 파업 중에 쫓겨난 그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전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의해 언론재단 경영본부장으로 추천·임명돼 재단의 반발을 샀다.

그가 2001년 발간한 저서에는 현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언급돼 있다. "박근혜씨는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돌연 총격으로 돌아가자 1974년부터 약 5년 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행했다. 대통령 딸이 퍼스트레이디 역을 맡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비정상적이고 특이하면 부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인사 전횡과 불통, 불공정 보도를 일삼아 파업을 유발한 김성수 씨가 연합뉴스 사장이 되는 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부작용이 반드시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눈치보기의 화신 박노황

연합뉴스 공채 3기인 박노황씨도 오래 편집국을 떠나있다가 2009년 박정찬 사장 취임과 함께 편집국장장으로 컴백했다. 취임 2주만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태를 맞은 그는 보도축소를 유도해 서거 당일 273건이었던 기사 수를 영결식날 106건으로 3분의1 토막을 냈다. '톤 다운하고 드라이하게 쓰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린 결과였다. 당시 공정정보위원회의 문제제기에 그는 "현장의 기자들이 자칫 조문 분위기에 묻혀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가급적 드라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취임초기부터 시작된 그의 정치권력 눈치보기는 편향보도로 귀결돼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일선 기자들이 시민들의 불만을 피해 연합뉴스 스티커를 가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했다. 그는 경영진의 지시와 기사개입을 여과없이 편집국에 전달해, 기자들이 공유하는 편집권의 수호자 노릇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 결과는 2012년 파업으로 나타났다.

임원자리를 꿰찼다가 파업 직후 사표를 던진 그는 연합인포맥스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6개월만에 다시 연합뉴스 사장에 도전하는 기업을 토했다. 도전에 실패한 그는 다시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로 복귀해 연합인포맥스 구성원들을 경악시켰다.



인포맥스의 산모 박호근..출마시도했다 망신

1982년 연합뉴스 공채 2기로 입사한 박호근씨는 경제통으로 2000년 금융정보제공 업체인 자회사 연합인포맥스가 분사할 때 함께 나가 이 회사가 매출 200억원, 순이익 23억원의 회사로 성장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아울러 연합뉴스 6년차였던 1987년 기자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연합뉴스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주요 경력으로 꼽는다.

그의 아킬레스건은 출마를 시도했다가 망신만 당한 전력이다. 그는 2012년 인포맥스 사장 재직시 고향인 울산에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어 선거지원금을 건넸지만, 여당 공천이 어려워지자 포기했다. 당시 그는 언론사 대표로서 선거 90일전에 사퇴해야 하지 않느냐는 연합뉴스 노조의 문제제기에 "인포맥스는 언론사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했다가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종기사 지우고, 노조도 지우고...두 얼굴의 성기준

1982년 연합뉴스 2기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성기준씨는 2003년 사회부장, 2006년 편집국장장을 거쳐 박정찬 전 사장 당시인 2009년 연합뉴스 기획총무 상무가 된다.

그는 과거 사회부장 재직시 다소 합리적으로 부서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편집국장장을 지내던 2007년 7월 8일 연합뉴스의 특종 보도였던 신정아 박사학위 학력 위조 기사를 작성 기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포털 등 인터넷

에서 삭제한 전력이 있다. 이후 해당 기사는 기자협회의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중요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등 권력의 핵심부와 관계돼 한동안 큰 화제가 됐다. 그가 무리하게 기사를 삭제한 것은 변 실장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 있다.

그는 박 사장이 노조의 반대를 묵살하고 연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상무에서 전무로 화려하게 승진한다. 파업 당시 노사관계를 담당했던 그는 박 사장 연임 이후 특히 노조에 더욱 수위 높은,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박 사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일부 임원이 명목상으로나마 노사소통을 호소하면서 임원직을 내려놓았을 때도 그는 "박 사장은 합법적으로 선임된 사장"이라는 공색한 표현만을 되풀이하며 노조가 일방적으로 물러날 것을 강요했다. 당시 사내에서는 이런 그의 모습을 두고 '진흥회에 잘 보여 차기 사장을 노리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파업 유발의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파업 당시에도 대화보다는 노조의 일방적인 항복을 강요한 그가 연합뉴스의 사장이 된다면, 이제 겨우 웨맨 회사의 상처가 다시 덧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한손엔 권위주의, 한손엔 특정대학 패거리문화 틀어쥔 오재석

연합뉴스 4기로 1984년 입사한 오재석씨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정치부장을 지내고 이어 정치담당 부국장을 거쳐 2008년 편집국장장이 된다.

당시 그는 아랫사람들이 숨도 못 쉴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조직을 자신의 지배 하에 두고 자 하는 이른바 '보스' 기질이 강해 아래의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 특히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경영 능력과 함께 사내소통 능력을 차기 경영진의 주요 요건으로 꼽은 상황에서 향후 사내 갈등과 노사 대립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이다. 더구나 조직 장악을 꾀하는 과정에서 '편집과 경영 분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파업의 중요한 성과인 편집총국 장제의 폐지를 기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권위주의 못지않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걱정하는 것은 이른바 특정 학맥 '패거리문화'의 주역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학연과 지연에 상관없이 구성원의 열정과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를 해야 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사장이 특정대학 출신을 편애하거나 이외 학교 출신을 배척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이는 중요한 결격사유다. 일부 조합원은 "오재석 사장이 오면 그 대학 출신 아닌 사람들은 모두 끝장"이라는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사장 선출 절차, 공정성 담보 의문

연합뉴스 사장 추천권을 가진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의 사장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진흥회의 추천에 앞서 복수 후보를 선발하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에서부터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는 사장 후보에 대한 최종 추천권을 가진 진흥회가 '예선' 격인 사장추천위원회에도 이사 3명을 직접 포진시킨다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외부 추천인사 2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6년 진흥회와 당시 노동

조합 집행부는 외부 추천인사를 노조-진흥회 공동 추천 1명과 노조 추천 1명으로 구성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사추위 구성 과정에서 진흥회는 2006년 노조가 진흥회에 보낸 공문에 '진흥회-연합뉴스 협의 추천'으로 기재했다는 것과 비공개인 자체 내규를 들어 외부인사 추천에서 노조를 배제했다. 이는 송현승 사장을 선임했던 지난 2013년 진흥회의 위임을 받은 사추위가 노조와 협의해 사추위원 1명을 추천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사장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사추위에 사원들을 대표하는 노조를 배제하고,

진흥회가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것은 사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장 공모절차에서 진흥회는 연합뉴스와 관계사 임직원이 사장후보로 나설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흥회는 사장 후보의 난립을 막고 사내 위계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책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기회균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 이외의 언론사 임직원이 사장 공모에 지원할 경우 사직원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안팎에서 제기됐다.

또한 CBS 등에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공영방송인 KBS나 MBC의 사장선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시비를 일으킬 여지가 많다.

실제로 사직원 제출 규정을 적용한 이번 사장 공모에서는 단 한 명의 연합뉴스 사원 응모자도 없었으며, 이는 기존 임원 출신과 파업유발자에게만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장공모 절차의 공정성은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칙, 사추위 구성의 불균형 요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이다. ■